

Successful Case of ESG Response by Foreign Companies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Writer

KOTRA 통상협력실 자료 제공

Contents

- I. ESG란?
- II.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의 ESG 추진 동향
 - 1. E : 환경
 - 2. S : 사회
 - 3. G : 거버넌스
- III. 미국 · EU ESG 법제화 동향
 - 1. 미국
 - 2. EU
- IV.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 KOTRA의 'Global Market Report 21-026 :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보고서 (www.kotra.or.kr)를 바탕으로 작성.

I. ESG란?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비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통칭한다. 재무제표나 현금 흐름과 같은 금전적 이익 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투자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등장한 기준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 · 투자은행 · 신평사 등을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적극 반영 중이다. 세계 최대 자산관리기업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20).

글로벌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화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자금시장에서 ESG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 · EU 등의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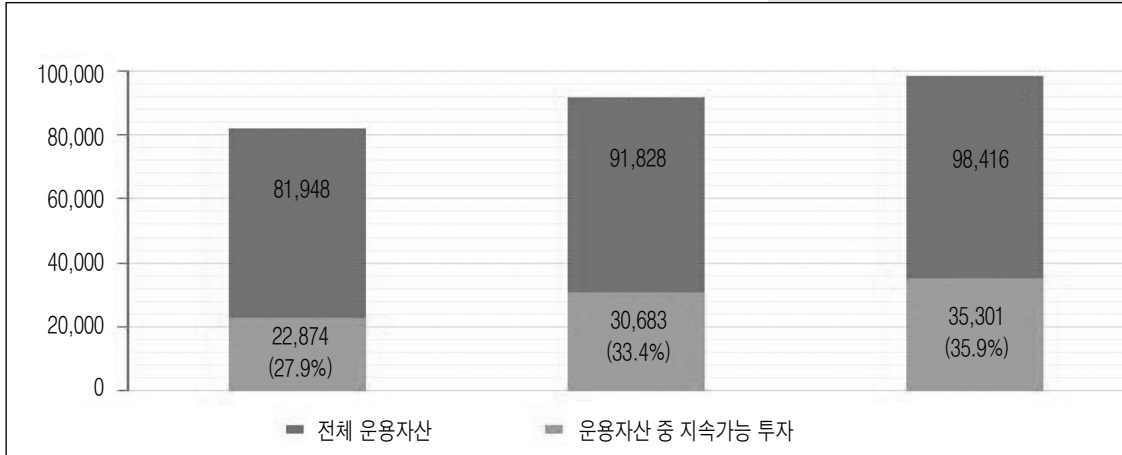
[표 1] ESG 항목별 주요 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 기후변화	· 인권	· 뇌물 및 부패
· 자원고갈	· 현대노예	· 경영진 보상
· 물	· 아동근로	·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 공해	· 근로조건	· 정치적 로비 및 기부
· 삼림파괴	· 근로자 관계	· 조세전략

[자료원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그림 1] 글로벌 운용자산 추이(2016~2020)

(단위 : 10억 달러)



[자료원 : GSIA 2020]

기업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국가차원에서도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국의 그린딜과 친환경에너지 정책 도입까지 맞물리면서 업계의 ESG 경영 확산이 촉진되고 있다.

II.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의 ESG 추진 동향

2020년 글로벌 투자자의 ESG 투자규모는 35.3조 달러로 2018년 대비 15%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7조

달러로 가장 높았고, 유럽은 12조 달러, 일본은 2.9조 달러를 투자했다([그림 1]).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요소의

[표 2] 글로벌기업의 협력업체 대상 'E' 관련 요구 사례

기업명	협력사 대상 요구사항
애플(Apple)	· 공급업체 대상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제조 요구 * 세계 11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 ('21.4월 기준) · 청정에너지 포털이라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
BMW	· '20년까지 풍력·바이오가스·태양광 등 자가 설비와 인증서 구매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원 전력 조달을 완료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 에게도 이를 요구
월마트(Walmart)	· '30년까지 10억 톤의 CO ₂ 를 감축하는게 목표(납품 협력업체의 탄소 절감량 포함)
홈디포(Home Depot)	· 연간 2.1%씩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35년까지 최종 50% 감축 계획 발표 - 협력사에 친환경적 사업에 동참 요구
마이크로 소프트(MS)	· 탄소 중립 달성에 더 나아가 탄소 네거티브 달성 계획 발표('20.1월) - '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달성과 '50년까지 1975년 설립 이후 배출한 모든 CO ₂ 제거 목표를 수립하고 협력사 대상 동참 요청

[자료원 : 기업별 발표내용, 언론 보도자료 종합]

[표 3] 글로벌기업의 협력업체대상 'S' 관련 요구 사례

기업명	협력사 대상 요구사항
테슬라(Tes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발트 채굴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환경오염 문제가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및 불법채굴을 인지함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국제권리변호사회로부터 '19년 피소 · '2019 임팩트 보고서'에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슬라 배터리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줄여나감으로써 니켈배터리를 만드는 코발트 프리 지향
월마트(Walm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성명서(Human Rights Statement)를 발표하고, 협력사에도 준수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수준 보장,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차별금지 및 젠더 평등 보장,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H&M/유니클로/나이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 사용 금지('20)

[자료원 : 기업별 발표내용, 언론 보도자료 종합]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에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1. E : 환경

'RE100'에 가입한 글로벌기업들이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글로벌리더십 이니셔티브 캠페인으로, 참여기업은 2050년까지 기존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2030년 60%→2040년 90%이상).

또한 계약서·협약서 등을 통한 명시적인 납품요건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2. S : 사회

코발트 채굴 관련 아동 노동 착취 등 불법노동, 인권침해 등을 타깃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3. G : 거버넌스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보다는 투자자 요구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다양성' 확대 및 경영진 보수와 ESG 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III. 미국 · EU ESG 법제화 동향

1. 미국

(1) 환경 (Environment)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관련 특별조직과 신규 보직 신설 및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규 보직은 백악관 내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특사(JohnKerry) 및 전 미 기후 고문(N'tlClimateAdviser,GinaMcCarthy) 등 보직을 신설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기후 공약으로 ▲파리협정 재가입,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2025년까지 타깃 목표 수립), ▲2조 달러 규모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가스 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중단 등을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1.20),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1.27.) 및 '클린자동차·트럭 내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

[표 4] 글로벌기업의 'G' 강화 사례

기업명	'G' 강화 추진내역
클로락스(Clorox)	· CEO와 CFO 보상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플라스틱 포장재 감소 등과 연계('19) - '30년까지 최초사용 플라스틱(virgin plastic) 포장재 및 섬유 50% 감축, '25년까지 모든 포장재 100% 재활용 혹은 재사용 목표 수립
넷플릭스(Netflix)	· '26년까지 격년제로 다양성 조사를 지속 · 다양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2,000만 달러의 '창작발전기금'을 투자 예정
맥도날드 (McDonalds)	· '25년 말까지 리더십, 선임 디렉터 이상의 직급에 여성 비중을 37→45%, 소수집단 비중을 29→35%로 높일 예정 - 다양성 성과 목표와 임원 보너스를 연계
스타벅스(Starbucks)	· '25년까지 흑인 및 소수인종 직원 채용 목표 30% 달성 - 경영진 보상과 연계

[자료원 : 기업별 발표내용, 언론 보도자료 종합]

령(8.5.) 등의 내용을 중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요소로 간주
미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후변

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120일 이내).

② 국제적 협의 채널(G7, 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 아젠다를 우선적 논의 추진
파리협약 재가입 및 이에 필요한 국가결정기여(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수립작업을 착수했다.

기후정상회의(4.22.)를 통해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50~52%를 감축하겠다고 국가결정기여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백악

[표 5]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범정부적 접근방안' 발표내용

부문	주요 계획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비 모금	· '24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3배 증액하고 관련 기구 예산 증액을 위한 국제 기후 재정 계획 신설 및 미국 주도의 기후회담 유치 지속
에너지 시스템 변화	· 화석연료 주요 생산국(캐나다, 노르웨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과 탄소 중립 기술 논의 · '30년까지 450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인도와 파트너십 체결
운송 부문 활성화	· 전기자동차와 기반산업 개발에 대한 투자 증진과 항공·선박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
미래를 위한 인력 구축 및 경쟁력 확보	· 친환경·스마트기술 기반의 제조산업 구축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수출입은행(EXIM) 청정에너지 자문위원회 구성
청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혁신	· 국내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산업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해외 친환경 발전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핵융합 발전기술 공유 검토
기후위기 취약국을 위한 긴급 지원	· 태평양 기후대비 정책과 카리브해 에너지 복원 정책을 연동하여 취약한 섬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운송,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생태계 보전형 탄소 감축 정책	· 열대 우림 재건을 위한 산림기금(LEAF)에 10억 달러, 해안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3,400만 달러 투자
국내외 안전·보안 증진	· 2년 내 국내외 기관에서 국방부의 기후 위기대응 매뉴얼(DCAT)을 도입하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추후 동맹국과 DCAT 공유 가능성 검토

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범정부적 접근 방안 (whole-of-government approach)' 을 발표했다([표 5]).

③ 에너지·환경규제 강화 예고
부처별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검토를 통해 유예·수정·철회 여부를 고려했다. ▲오일 가스분야 메탄가스 배출 감축, ▲자동차 연비, ▲가전·기계 에너지 절약기준 및 ▲유해 공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한 내에 조치를 결정할 예정인 자동차 분야 내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2030년 판매되는 신차(승용차, 경트럭)의 절반을 배터리·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ZEV)로 생산하도록 하는 목표의 발표('21.8월, 행정명령) 및 ▲차종별 연비·온실가스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를 신규 발표할 예정이다('27~'30 모델 적용).

또한 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추

정할 것을 지시해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한다.

④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 석유·천연가스 시추 신규 허가 중단 및 연방정부의 화석 연료 직접 보조금을 중단한다. 또한 연방정부 구매력과 자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생산을 확대해나간다.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후공해 축소 의무화 및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

한편 미 정부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이다. 2021 USTR 통상아젠다를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교역국이 기존 무역협정 내 환경기준을 위반할 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 제도는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보다 수입품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관리들에게 탄소국

경세가 초래할 영향과 금액부과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21.5월).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 타깃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을 발의했다('21.7.19).

환경규정 위반도 WTO에서 규정하는 상계 가능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동일하게 대응토록 제안하고 있다. '공정경쟁 환경무역규칙을 통한 지속가능 목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다('20.12.17.).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출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각료회의(시기 미정)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될 필요가 있다.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젠슬러는 올해 연말까지 기후리스크 정보공개규칙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공사가 10-K(사업보고서)에 포함돼 제출해야 할지 검토 중인데, 양적 공시

※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주요 내용

- 적용 분야: 알루미늄, 시멘트, 철, 추후 지정품목 및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인 품목

- 적용 시기: '24.1.1.

- 면제국: 최빈개도국, 미국산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국가 등

와 질적 공시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적 공시는 온실가스배출량 지표,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목표 진척사항 등을 말하고, 질적 공시는 기업 최고경영진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관리방식과 관련 요소들이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요 질문에 답하는 형태이다. 현재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 여부 선택이 가능하다(권고사항), 또한 미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RB)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에 ‘금융안정 기후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와 ‘기후 감독위원회(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신설했다.

(2) 사회 (Social)

2021 미국 통상정책아젠다를 통해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의지를 구체화했다. 기존 무역협정 내 노동자 조항을 완벽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USMCA 위반사례 해결을 위해 협정 내 노동분쟁 해결 절차인 신속 대응 절차(Rapid Response Mechanism)에 따른 직권 개시나 제소 해

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무역정책을 수립할 때에 강력하고 집행 가능한 노동기준을 포함한다. 노동조항이 강화된 USMCA를 본뜬 FTA의 추진 가능성이 높다. 강제노동·노동 착취 근절 및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무역조치(the full range of trade tools at its disposal)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덧붙여 강제노동 근절 및 기업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모든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신장위구르 지역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 대상 인도 보류 명령 발동, 미 상원의 중국 신장제품 수입 금지안 통과(‘21.7.1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기후변화·불법노동을 미래 핵심품목(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고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에

서는 미국 내 신규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서의 높은 노동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세액 공제, 대출 및 지원금 등을 통해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조합 설립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지배구조 (Governance)

나스닥은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회사들 이사진의 다양성 증진을 의무화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20.12월). SEC가 이 제안을 승인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나스닥 상장사들은 최소 2명의 이사를 소수계층에서 선임할 의무가 생긴다. 1명은 여성, 1명은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LGBTQ)를 선임해야만 한다.

2. EU

(1)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초안 공개

EU는 지난 7월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 초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

비)을 위한 기후대응법안 패키지의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고('21.7월), 그 패키지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을 공개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EU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로 한정되며,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와 통합하여 시행된다.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가격(EU ETS 배출권 경매 증가의 주당 평균 가격 적용)은 연동된다.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직접 배출만 해당. 실제 배출량 산정 불가 시 디폴트배출량 적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re,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 필요)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참고로 디폴트 배출량(Default value)은 대상 품목별 수출국의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하거나 국가별 수치 파악 불가 시 동일 품목의 EU 역내 배출량 상위 10% 평균치를 적용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가이드라인 수립 후 발표 예정이다.

매년 5월 말까지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수량,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인증서

수량을 CBAM 당국에 신고·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입품 원산지에서 탄소 비용을 미리 납부한 경우, 기납부비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감면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출자 대상 할인액 및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지출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ETS에서 역내 시설 대상으로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는 수준을 반영하여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 예정이다.

특정 제품의 CBAM 인증서 제출량=(해당 제품의 배출량)-(EU ETS에서의 해당 제품에 부여된 무상 할당량)

별금은 미납인증서당 100 유로이고, EFTA 등 일부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EU 외부 영토(Ceuta, Melilla 등)는 미적용이다.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승인을 받으면 2023년 일부 시행 후 2026년 1월 1일부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3년간 이행기간(transition alperiod)을 설정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전환기간동안 대상 품목 확장 여부와 간접배출 탄소에도 비용을 부과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 20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EU는 20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안을 발표했다.

규제대상은 경량자동차(Light Duty Vehicle,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로, 중량자동차(Heavy Duty Vehicle, 트럭, 버스 등)의 배출규제 개정안은 2022년 별도 발표 예정이다.

주기별 CO₂ 배출 감축목표는 승용차의 경우 현행 95g CO₂/km에서 2025년까지 -15%(중전 동일), 2030년까지 -37.5%에서 -55%로 목표를 강화하고, 2035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는 것을 신설했다.

소형 상용차는 기존 147g CO₂/km에서 2025년까지 -15%(중전 동일), 2030년까지 -31%에서 -50%로 목표를 강화하고, 2035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는 것을 신설했다.

2022년 초 EU의회 논의를 시작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최종승인이 될 전망이다. 이사회 통과 후 개별 회원국의 입법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3) 탈 플라스틱 정책 추진

EU에서는 탈 플라스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을 높이면서 대체재(바이오 플라스틱 등)를 개발해 ‘순환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2월 ‘순환경제폐기물’ 발표 후 순환경제실행계획(’20.3월), 플라스틱세(’20.7월), 플라스틱폐기물 수출 규제(’20.12월)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① 순환경제실행계획

제품설계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순환경제실행계획’을 2020년 3월에 발표했다.

이 실행계획은 제품의 설계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자원이 가능한 오랫동안 EU 경제에 머물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EU집행위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최대 80%가 제품 설계에서 결정되므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가치사슬 초기 단계인 제품설계가 중요하다 판단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개별규정 또는 지침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지침의 플라스틱병 재활용수거율은 77%(’25년)→90%(’29년), 플라스틱 폐기물 지침에서 도시폐기물 재활용은 최소 55%(’25년)→60%(’30년)→65%(’35년), 포장재 지침의 플라스틱포장재 재활용률은 50%(’25년)→55%(’30년) 등이다.

② 플라스틱세

EU이사회에서 플라스틱폐기물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세를 2020년 7월에 채택했다.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 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연간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EU에 납입한다. 국가별로 부과 시기, 대상 및 방법은 상이하다.

③ 플라스틱폐기물 수출 규제

역내 폐기물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유해 플라스틱폐기물 수출을 2020년 12월부터 금지하고, EU 역외로 재활용 불가 또는 유해 플라스틱폐기물의 전면 수출을 2021년 1월부터

금지했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폐기물의 유해성 표형태 ▲처리기준 등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4)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 Directive) 추진

UN, OECD 등에서 환경·인권 보호 관련,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EU집행위의 법무담당 집행위원(Didier Rynders)이 기업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강제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2020년 4월 발표했다. 회원국이 개별 도입한 ESG(환경·인권·거버넌스) 법안은 아동노동 등 특정 이슈에만 초점을 맞춰 ESG 전반을 다루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U집행위는 올 3분기 중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공협의(’20.6~’21.2월) 등을 통해 법안(지침 형태)을 마련 중으로,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U

회원국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회원국별로 실정에 맞게 국내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의결권을 가진 유럽의회에서 의회 입장을 정리한 '기업의 실사의무' 결의안을 채택('21.3.10)함으로써 추진방향을 유추할 수는 있다.

적용대상은 EU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결의안에서 EU 비 재무정보보고 지침(NFRD)을 인용한 바, 동 기준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NFRD는 비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활동의 사회·환경영

향을 공개토록하는 지침으로, 지침 내 대기업기준은 ▲근로자500인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등이다. 이어서 중소기업은 상장기업과 고위험기업을 말한다. 고위험기업은 정의되지 않았으나 분쟁광물 채취가 공급망에 포함된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배터리·ICT 등에 적용될 것이 유력하다(결의안 서문에서 OECD 분쟁광물 가이드라인 언급).

또한 제3국에서 설립되었으나 EU 역내 시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실사의무는 ESG 관련

기업활동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확인(identify)·대응(address)·시정(remedy)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ESG 실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식별·평가(identify, assess), ▲이름 예방, 중단 또는 완화(prevent, cease, mitigate),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monitor), ▲보고·설명(communicate, account for), ▲적절히 대응 및 피해구제(address, remediate)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자체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 또는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 있

[표 6] 분야별 세부 규제내용

분야	세부 규제내용
기술문서	· '24.7.1부터 전기자동차 및 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 기술문서 작성 의무 *기술문서 포함 정보: 생산기업, 탄소발자국, 제조자 선언서, 선언내용 증명 가능한 링크 등
탄소발자국	· '24.7.1부터 기술문서에 포함될 탄소발자국(footprint declaration) 적용 및 '27.7.1부터 탄소발자국 배출 상한 기준(maximum lifecycle carbon footprint thresholds) 적용 - 집행위는 '23.7.1까지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예정
재활용 원료	· '30.1.1부터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내 코발트·납·리튬·니켈 물질에 대해 재활용 원료 사용비를 의무화 및 '35년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 - ('30.1.1일부 적용)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 ('35.1.1일부 적용) 코발트 20%, 납 85%, 리튬 10%, 니켈 12% · 이밖에 동 4개 물질은 '27.1.1부터 기술문서 작성 필요. 이를 위해 집행위는 '25.12.31.까지 물질 함유량의 측정 방법 및 기술문서 작성기준 마련 예정
지속가능성	· 배터리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포함한 라벨링, 제품안전, 생산자 책임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 기준 수립 *집행위, 배터리 폐기물 수거비용 목표 '25년 65% 및 '30년 70% 설정
배터리 여권	· '26.1.1.일까지 역내 시장 내 유통되는 배터리의 제품정보 및 처리·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Passport) 시스템 도입 예정
시장 감독	·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 강화

는 기업에 대해서도 실사의무가 확장된다.

또한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여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위반 시 제재는 개별 회원국에서 국내법 제정 시 처벌조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매출액 비례 과징금 부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부 조달이나 국가지원정책에서

제외 등의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또 자체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협력사로 인한 ESG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토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의무위반 책임을 원고(피해자)에서 피고(기업)에게로 전환,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사법적 수단 강구 및 EU 사법기관에 제소도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2021년 3분기 중 관련 지침을 제안하고, 이사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 친환경 배터리 규제안 발표

역내 기준을 국제 배터리산업 표준으로 수립하고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중점 육성 중인 산업(배터리 등)의 타깃 조치를 가시화했다.

2020년 12월 10일에 친환경

[표 7] 투자대상별 의무공시사항

적용	구분	Indicator	Metrics	
투자국가	환경	①온실가스 배출	피투자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사회	②사회 관련 국제규범 등 위반	국제법, UN 원칙, 국제조약상 사회 규범 위반 건수 (투자국 평균 위반 건수)	
부동산	화석연료	③부동산을 통한 화석연료 익스포져	화석연료 채굴, 저장, 이동, 제조 관련 부동산 투자 비중	
	에너지 효율성	④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익스포져	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투자 비중	
투자기업	환경	온실가스 배출	⑤온실가스배출량	Scope 1 온실가스배출량
				Scope 2 온실가스배출량
				Scope 3 온실가스배출량
				총 온실가스배출량
			⑥탄소발자국	탄소 발자국
			⑦피투자기업 집약도 (intensity)	피투자기업의 매출액 기반 집약도(intensity)
			⑧화석연료 관련 기업 익스포져	화석연료 관련 기업 투자 비중
			⑨비재생에너지 소비 · 생산 비중	피투자기업의 재생에너지 대비 비재생에너지 소비 · 생산 비중
			⑩에너지 소비 집약도 (intensity)	피투자기업의 수익(백만유로)당 에너지 소비량(GWh)
		생물다양성	⑪생태보호구역 내 부정적 영향 활동	생태보호구역 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 투자 비중
	수자원	⑫폐수 방출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기업 배출 폐수량(톤)	
	폐기물	⑬유해폐기물 비율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기업 배출 폐기물량(톤)	
	사회	사회와 근로자	⑭국제규범/기준 위반	UNGC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G/L 위반한 기업 투자 비중
			⑮국제규범/기준 준수 감독 미흡	UNGC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G/L 준수 감독체계가 없는 기업 투자 비중
⑯남녀 임금 차이			피투자기업 평균 남녀 임금 차	
⑰이사회 성별 다양성			피투자기업의 평균 남성이사 대 여성이사 비율	
⑱분쟁무기 익스포져			분쟁무기 제조 · 판매 관련 기업 투자 비중	

[자료원 : ESG Focus June 2021, 법무법인 광장 ESG Group]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활용 원료 비율 강화, ▲지속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위반 시 역내 시장 유통 및 판매를 불가하기로 했다.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 재활용까지 전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순환경제 관점에 입각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6)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시행

기후 변화와 투자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제고에 부응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책임을 부과해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시행하기로 했다.

EU의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기업 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상품 수준에서의 비재무적 금융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7)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시행

2017년부터 EU 역내 기업들 중 특히 대기업의 사회 및 환경영향을 비 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내 상장기업, 비상장 은행·보험사 및 회원국에서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중 근로자 5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이익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약 11,000개 기업에게 환경·인권 보호, 사회적 책임, 반부패, 뇌물, 이사진 다양성, 기업활동의 기존·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 무 절차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감사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기업은 ‘Comply or Explain(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시에는 설명)’ 원칙에 입각해 해당 공시내용을 사업 보고서나 별도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보고에 대한 감사의무, 상세 비재무정보보고지침 등을 담은 수정안을 지난 4월 21일에 제안했다.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

존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기업 확대,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정보 구체화,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감사의무 도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마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규정했다.

그 결과 적용대상은 모든 대기업(상장 대기업+비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상장 micro-enterprise 제외)으로 약 50,0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보고정보는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지속가능성 관련), ▲지속가능성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상황,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행정/관리/감독기관의 역할,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정책,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실사 절차(due diligence process), 사업의 공급망과 관련된 주요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개선하기 위한 조치 및 조치결과,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사업의 주요 위험 등(제1조(3))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EU 차원의 감사(보증) 요건을 도입했다(제3조(12)).

EU집행위는 2022년 10월 31

[표 8] EU 분류체계 개요

6대 환경목표	판단조건
①기후변화 완화 : 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①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 수준 기여 ②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중대한 무해성 원칙 : DNSH) ③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 UN 기업 및 인권지침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④기술심사기준에 부합

[표 9] 투자자·글로벌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

구분	국가	기업명(주요사업)	추진 내역
E	미국	세븐스 제너레이션 (생활용품)	· 아마존 벤더로서 권장사항인 기후 서약(Climature Pledge) 캠페인 활동에 동참 : 20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 · 아마존 플랫폼 내 신설된 지속가능성 인증제품 전용 코너인 'Climate Pledge Friendly' 에도 55개 제품 등록·판매
	일본	세븐&아이 홀딩스 (세븐일레븐 포함 편의점 체인 운영)	· 미국 편의점 점유율 3위인 '스피드 웨이' 인수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탈 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 제기 · '50년까지 일본 내 점포 운영에 따른 CO ₂ 배출량 제로 목표 - '21년 2분기부터 임원 급여에 CO ₂ 감축량을 반영하여 2% 감축 시 5% 인상, 2%이상 증가 시 10% 인하
	프랑스	에어버스 (항공기제조)	· 환경데이터 공개(에너지·전력 소비·CO ₂ 배출량 등) · '35년까지 수소를 연료로 한 기후중립 비행기 생산 추진 - 프로토타입 공개('20.9월)
S	일본	메이지 (식품)	· 삼림 파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자사에서 지원한 지역 농가 카카오 콩만으로 100% 조달 계획
	일본	후지오일 (식료품)	· 원료조달 카카오 농장에서 '30년까지 아동노동 근절 추진 · 팜유 생산 공급망 100% 관리, 고충처리 메커니즘 도입
	미국	HP(컴퓨터 HW)	· 미국 내 여성, 소수민족 소유기업에 10억 달러 투자
G	일본	히타치(전자기기·부품)	· '30년까지 여성 임원 30%, 외국인 임원 비율 30%까지 확대

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채택(위임법률)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제1조 (4)). 유럽 금융 보고 자문 그룹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은 재무제표와 경영 보고서를 ESEF 규정 (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Regulation)에 따라 XHTML 형식으로 작성하고, 그 규정에 명시된 디지털분류

시스템 (digital categorisation system)에 따라 보고된 지속가능성 정보에 '태그 (tag)'를 달아야 한다.

(8) EU 분류체계 규정 (EU Taxonomy Regulation)
EU 집행위는 지속가능금융

[표 10] 오일메이저 · 내연기관차 관련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 발굴

구분	국가	기업명	추진 내역
오일 메이저	영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30년까지 원유, 가스 생산량의 40% 감축 계획 발표 · 매년 50억 달러를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해상풍력 시장에 11억 달러 투자('20), 영국 3GW 해상풍력단지에도 입찰 참가 - 유럽 최대 태양광발전사인 Lightsource 지분 50% 확보 · 바이오 에너지와 수소에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 7,500대를 '30년까지 7만대로 확대 (Chargemaster 등 충전 업체 인수확대) · 호주 Santos Moomba 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하는 CO₂ 1,700만 톤 CCS 프로젝트에 투자 검토 중
	미국	엑손모빌 (Exxon Mob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CCS)에 3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21.2월) * 연간 700만 톤 탄소포집 가능 CCS 시설 보유(와이오밍) · 바이오 연료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와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 추진
	영국 · 네덜란드	셸 (Sh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 가스'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회사' 로서 '전기회사' 로 탈바꿈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3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투자금 중 80%를 전력 부문에 집중 추진 * 영국 전기가스 공급사인 First Utility와 전기차 충전업체 New Motion 인수('17) · 석유와 석탄의 비중을 줄이면서, 풍력, 태양광, 수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에 투자 집중
	미국	세브론 (Chevr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28년까지 30억 달러 투자계획 - 20억 달러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재생에너지 및 오프셋(offset) 활동에 7억 5천만 달러 투자 예정 - 3억 달러를 저탄소 기술 펀드에 추가 투자 예정으로 전체 저탄소 기술 펀드 투자액은 5억 달러 * 탄소 포획 기술 및 저탄소 건축 자재를 개발한 스타트업 블루 플래닛(Blue Planet)에 투자 발표 · Schlumberger(Schlumberger) 및 MS와 파트너십을 맺고 캘리포니아에서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BECCS) 프로젝트 투자 계획 발표
내연 기관차	미국	제너럴모터스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 '20년부터 5년간 전기차 관련 제품 개발에 270달러 투입 · '35년까지 세계 공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
	프랑스	르노 (Ren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자사모델 최대 90% EV로 전환계획 - '25년까지 EV모델 10종 출시
전력	독일	RW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정부의 탈석탄정책('20)에 부응하기 위해 '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발표 - 풍력 발전,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집중투자 계획 · 풍력 · 태양광 프로젝트 48개 추진 중 : 풍력 44개(해상11, 육상33), 태양광 4개

행동계획 이행수단으로 분류 체계 규정을 2020년 7월 12일에 발효시키고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녹색경제 활동 여부의 판단기준을 수립

했다. 집행위는 1차 위임법률('21.4.21)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경제활동(9개 분야, 88개 활동)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활동(13개 분야 95개 활동)을 발표했다.

IV. 해외 기업의 ESG 대응

[표 11] 기존 사업모델(기술)을 토대로 ESG 요소와 접목하여 신사업 발굴

국가	기업명	추진 내역
일본	윌스테이지 (Wills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저리 용자를 받아 독자적인 수질 정화기술을 활용하여 육상 양식기술 개발 - 박테리아를 활성화시켜 수조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도 1년간 양식 가능 * 수중에서 복어의 독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현재 '독(毒)없는 복어' 약 2,000마리 시험양식 시행 중으로 양식에 성공할 경우 시가현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 예정
프랑스	까르푸 (Carref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이', '더 싸게'의 전통적 대형마트 모델에서 탈피하여 '신선함', '로컬', '유기농' 키워드 중심 모델로 전환 - 소비자 와 가까운 거리의 중소형 로컬 생산자와 거래 확대 - 교외의 초대형마트 모델 → '소비자 가까운 곳에서', '차이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 '합리적 가격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유형의 매장 확대

[표 12]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자본으로 활용

국가	기업명	자본 유치 내역
미국	바이탈팜즈(Vital Fa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 : 동물복지 계란, 유제품 판매 -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며 직접 경영하는 농장 확대보다는 225개의 소규모 가족 농장(동물복지농장)과 협력을 통해 판매 제품 생산 · 투자유치 : 대규모 투자유치보다 필요한 자본을 조금씩 조달한다는 전략 하에 1~2년 주기로 임팩트 자본 유치 - SJF Ventures에서 \$2.3M('13), Arborview Capital에서 \$2.25M('14), Sunrise Strategic Partners 등으로 부터 \$11.1M('17) 등 유치 - '20년 초에는 IPO(기업공개상장)으로 \$2억 유치에 성공
캐나다	카본큐어 테크놀로지(Carbon Cure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 : 포집 CO₂를 콘크리트 제조공정에 넣어 콘크리트 강도 제고 및 대기에서 CO₂를 영구 감축 · 자본유치 : 클린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2150, 아마존 기후서약 펀드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1,100만 달러 유치
프랑스	바라프그룹 (Varappe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 : 경력 단절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구직 서비스 제공 - '19년에는 5,300명을 교육하여 80%가 이직에 성공 · 투자유치 :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집중하는 Phitrust로부터 '07년 70만 유로 투자유치에 성공(프랑스 ESG 투자의 시초) - Phitrust는 바라프 그룹 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자문도 제공 - Phitrust를 비롯한 BNP Paribas 등으로부터 2차 투자자금인 420만 유로 유치에 성공
영국	그립에이블 (Grip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 : 뇌졸중, 관절염, 뇌성마비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과 팔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핸드그립(Hand Grip)을 개발 - 그립을 누르는 활동을 모바일 앱을 통해 근력, 반사작용 등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 맞춤형 게임과 연계한 재활운동 지원 · 투자유치 : Triple Point사가 운영하는 소셜 임팩트 펀드인 Impact EIS로부터 52.5만 파운드 유치('19)

성공사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6개국, 31개 기업의 ESG 대응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하고, ESG 대응 성공 사례를 조사했다.

1. 투자자·글로벌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

① 환경규제 강화
탄소배출량 감축, 폐기물 감소·재활용 확대,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유틸리티(물, 전기 등)/플라스틱·포장재

사용 감축, 제품 소싱 밸류체인에서 불법삼림 벌채 금지 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신 기술을 적극 채용하거나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② 인권보호

원자재 확보 시 아동노동 등 불법노동 방지

③ 다양성 제고

성별, 인종 등에 있어 다양성 확보 및 급여 평등 추구

2. 기존 사업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 발굴

① 오일메이저 · 내연기관차

기존 화석연료 사업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저탄소 분야로 사업재편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저유가 지속과 투자자 ESG 요구가 맞물려 오일메이저 기업들의 사업전략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② 기존 사업모델(기술)을 토대로 ESG 요소와 접목하여 신사업 발굴

3.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자본으로 활용

기후테크 등 ESG 아이টে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성장자본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자한 스타트업에 기업 방향성이나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 [9]

MEMBERS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